

# 한국 비영리기관의 현황과 특징

황 덕 순\*

## I. 들어가는 글

이 글의 목적은 비영리기관의 기본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NPO(비영리기관 국제분류기준), 법적 지위 등 주요 특성 변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sup>1)</sup>

우선 ICNPO는 원래 1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본 조사분석에서는 응답수와 유형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집단으로 재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문화 및 레저(ICNPO 1)와 교육 및 연구(ICNPO 2)를 하나로 묶어서 문화·교육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서비스(ICNPO 3)와 사회서비스(ICNPO 4)를 묶어서 사회서비스기관으로 합하였다.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와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지만, 본 조사에서 주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 9건밖에 조사되지 않아서 사회서비스라는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세 번째로 환경(ICNPO 5)과 법률·지원·정치(ICNPO 7)를 묶어서 환경·시민단체로 통합하였다. 환경단체와 법률·지원·정치는 구분되기도 하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의제화하여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특징이 있다고 보아서 환경·시민단체로 묶을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개발 및 주택과 고용(ICNPO 6) 및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ICNPO 11)는 다른 집단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 통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개별적으로는 응답수가 많지 않은 박애 및 자원봉사(ICNPO 8), 국제협력 및 지원(ICNPO 9), 종교(ICNPO 10), 기타(ICNPO 12)를 기타기관이라는 항목으로 합하였다.

기관규모는 2007년 말 피용자수 기준으로 다음의 여섯 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각은 피용자가 ① 0명, ② 1명, ③ 2~4명, ④ 5~9명, ⑤ 10~29명, ⑥ 30명 이상이다. 영리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1) 이 글은 김혜원 외(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자세한 분석결과는 이 책을 참조.

업인 경우 1명과 2~4명을 통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주로 연락을 목적으로 해서 간사 한명을 둔 조직과 2~4명이 일하는 조직은 성격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별도로 구분하였다. 30명 이상을 더 세분할 수도 있지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가 많고 조사된 전체 사업체 가운데 30인 이상이 9.0%로서 더 세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체의 법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조사된 분류 그대로 유지하되,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와 기타를 합하였다. 따라서 구분은 ① 재단법인, ② 사단법인, ③ 사회복지법인, ④ 비법인등록민간단체, ⑤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와 기타가 된다. 이외에 단독기관 여부에 따라서 ① 단독기관과 ② 다수기관의 본사·본점, ③ 다수기관의 지사·지점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기관의 설립시기는 ① 1970년대 이전(~1979년), ② 1980년대(1980~1989), ③ 1990년대 초반(1990~1994), ④ 1990년대 후반(1995~1999), ⑤ 2000년대 초반(2000~2004), ⑥ 2000년대 후반(2005~)으로 구분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 설문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여러 문항들과의 전반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시기에 어떤 기관 형태의 조직이 어떤 목적으로 주로 설립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는 ① 서울, ② 서울 이외 광역시, ③ 중소도시, ④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서울 이외 광역시의 군부의 경우에도 광역시에 포함시켰다.

각 변수별로 살펴본 기본적인 분포는 다음 <표 1>과 같다. 한편 이 표에서는 비영리기관의 유형 구분명칭을 더 간결하게 표시하였다. 대부분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였고,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의 경우에는 이익단체로 표현을 바꾸었다.

<표 1> 주요 기관특성별 분포

(단위: 개, %)

	항목	빈도	비율		항목	빈도	비율
I C N P O	문화·교육	5,972	15.9	법적 지위	재단법인	6,456	17.2
	사회서비스	16,613	44.2		사단법인	14,326	38.1
	시민단체	3,390	9.0		사회복지법인	2,088	5.6
	개발·고용	4,140	11.0		비법인등록	12,939	34.4
	이익단체	4,407	11.7		비법인미등록	1,787	4.8
	기타	3,092	8.2		0명	2,182	5.8
설립 시기	1980년 이전	5,209	13.9	기관 규모	1명	4,512	12.1
	1980년대	3,774	10.0		2~4명	10,992	29.4
	1990년대 초	3,655	9.7		5~9명	9,000	24.1
	1990년대 후	7,769	20.7		10~29명	7,364	19.7
	2000년대 초	10,606	28.2		30 이상	3,358	9.0
	2005년 이후	6,601	17.6		서울	13,857	36.8
	단독 기관	단독기관	30,782		81.8	광역시	6,639
여부	본사·본점	1,925	5.1	소재 지역	중소도시	14,501	38.6
	지사·지점	4,906	13.0		농어촌	2,617	7.0

관측치: 37,613

교육과 보건 분야를 제외한 비영리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이다. 전체의 44.2%를 차지하며 1만 6천 6백여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교육기관으로 약 6천 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비중은 15.9%를 차지한다. 나머지 네 개 분야가 10% 내외씩 분포하고 있는데 환경·시민단체가 9.0%,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이 11.0%,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가 11.7%, 기타 기관이 8.2%이다.

설립시기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 67.4%로서 최근에 비영리기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기관이 28.2%로 가장 비중이 크고, 2005년 이후 설립된 기관도 17.6%로서 200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45.8%에 해당된다. 그 이전 시기를 보면 1980년대 이전이 13.9%, 1980년대가 10.0%, 1990년대 초반이 9.7%로서 비영리기관의 활동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후반(20.7%)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관의 법적 지위별로는 사단법인의 비중이 1만 4천여개인 38.1%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비법인등록민간단체로서 34.4%를 차지한다. 재단법인은 5천여개인 17.2%, 사회복지법인인 2천여개인 5.6%로서 사단법인을 포함해서 법인 형태의 기관을 모두 합하면 60.8%로서 과반수가 넘는다.<sup>2)</sup>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는 약 1천 8백개인 4.8%로 추계되었지만, 이 유형의 조직은 표본설계상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소추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독기관 여부에 대해서는 81.8%의 기관이 단독기관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수기관의 본사·본점은 5.1%, 다수기관의 지사·지점은 13.0%로서 전체적으로는 2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된 비영리기관의 평균근로자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12.0명이다. 규모별 분포를 보면 2~4명인 경우가 29.4%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1명인 경우(17.9%)와 한 명도 없는 경우(5.8%)를 합하면 47.3%로서 약 절반정도가 5명도 안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기관이다.<sup>3)</sup>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소재 기관이 3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36.8%를 차지한다. 광역시 소재 기관은 17.7%, 농어촌 소재 기관은 7.0%이다.

2) 이 조사결과는 사업체 단위의 수치로서 법인 산하에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법인수에 관한 행정통계와는 다를 수 있다.  
3) 소규모사업체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는 고용보험DB를 모집단으로 해서 표본을 설계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명부로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기관이 실제 분포보다 과소추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과반수 이상의 기관들이 5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II. ICNPO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특징

여기에서는 ICNPO 구분을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주요 기관 특성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CNPO와 설립시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ICNPO와 설립시기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대다수의 기관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했고 2000년대 이후 성장속도가 더 빨라지지만,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회서비스 기관이다. 사회서비스 기관은 2005년 이후 등장한 기관이 22.3%로서 전체 평균(17.6%)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이 비중이 높다. 이는 이 시기에 고령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실업대책이나 일자리 창출정책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한 기관들의 비중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데 예외적인 분야가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이다. 이 분야의 경우 1980년 이전에 등장한 기관의 비중이 26.6%로서 전체 평균 13.9%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1990년대 초반까지 설립된 기관이 52.7%로서 과반수를 넘는다. 이는 한국에서 이익대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의 기관보다 더 일찍 확산되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환경·시민단체의 경우 대체로 전반적인 추세와 차이가 크지 않지만, 1980년대 이전에 등장한 기관의 비중(9.0%)은 전체 평균(13.9%)보다 상당히 낮고, 민주화가 확산된 1980년대에 등장한 기관의 비중이 18.9%로서 전체 평균(10.0%)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의 기관들보다 이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표 2> ICNPO별 설립시기 분포

(단위: 명, %)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		2000년대 초반		2005년 이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교육	997	16.7	598	10	292	4.9	1,342	22.5	2,082	34.9	662	11.1	5,972
사회서비스	1,756	10.6	1,342	8.1	1,836	11.1	3,228	19.4	4,751	28.6	3,701	22.3	16,613
시민단체	306	9.0	641	18.9	235	6.9	679	20.0	925	27.3	604	17.8	3,390
개발·고용	494	11.9	570	13.8	236	5.7	1,010	24.4	1,045	25.2	786	19.0	4,140
이익단체	1,172	26.6	353	8.0	796	18.1	590	13.4	910	20.7	587	13.3	4,407
기타	484	15.7	271	8.8	262	8.5	921	29.8	894	28.9	261	8.4	3,092
전체	5,209	13.9	3,774	10.0	3,655	9.7	7,769	20.7	10,606	28.2	6,601	17.6	37,613

관측치 : 37,613,  $\chi^2(25)=2,794$

이외에 분야별로 약간씩 서로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화·교육기관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과 기타 기관은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두번째로 ICNPO와 기관의 법적 지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체로 법인이 비법인에 비해 조직의 공식화 정도가 높고, 법인 가운데서도 재단법인이 사단법인에 비해 재정적 안정성 때문에 기관의 안정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기관(38.1%)이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사단법인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분야는 환경·시민단체(51.8%), 문화·교육기관(48.4%),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47.1%),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42.2%)이다.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재단법인(19.9%), 사회복지법인(8.0%), 비법인등록민간단체(39.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기타 기관의 경우 재단법인의 비중이 29.2%로서 전체 평균인 17.2%보다 상당히 높고,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의 비중도 12.7%로서 전체 평균인 4.8%보다 높아서 상당히 이질적인 기관들이 섞여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ICNPO에 따라서 단독기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의 경우 단독기관의 비중이 75.1%로서 전체 평균인 81.8%보다 낮고,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과 기타 기관이 단독기관의 비중이 85.4%와 85.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ICNPO와 기관 규모의 관계는 <표 5>와 같다. 이에 따르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평균근로자수는 12.0명이고 평균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로서 한 기관당 17.4명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이 사회서비스기관으로서 평균피용자수가 13.5명이다.<sup>4)</sup> 다음으로 문화·교육기관과 기타 기관이 각각 10.8명으로 비슷한 규모를

<표 3> ICNPO별 법적 지위 분포

(단위: 명,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법인등록		비법인미등록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교육	819	13.7	2,889	48.4	338	5.7	1,571	26.3	354	5.9	5,972
사회서비스	3,304	19.9	4,934	29.7	1,332	8.0	6,513	39.3	512	3.1	16,595
시민단체	212	6.2	1,756	51.8	63	1.9	1,132	33.4	228	6.7	3,390
개발·고용	665	16.1	1,951	47.1	94	2.3	1,361	32.9	68	1.7	4,140
이익단체	553	12.6	1,858	42.2	109	2.5	1,653	37.5	233	5.3	4,407
기타	903	29.2	938	30.3	151	4.9	709	22.9	391	12.7	3,092
전체	6,456	17.2	14,326	38.1	2,088	5.6	12,939	34.4	1,787	4.8	37,595

관측치 : 37,595,  $\chi^2(20)=2,883$

4)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와 병원이 제외되었고, 일부만 이 분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표 4〉 ICNPO별 단독기관 여부 분포

(단위 : 명, %)

	단독기관		본사·본점		지사·지점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교육	4,999	83.7	443	7.4	529	8.9	5,972
사회서비스	13,602	81.9	680	4.1	2,330	14.0	16,613
시민단체	2,678	79.0	178	5.2	534	15.8	3,390
개발·고용	3,537	85.4	108	2.6	494	11.9	4,140
이익단체	3,311	75.1	284	6.5	811	18.4	4,407
기타	2,654	85.9	231	7.5	206	6.7	3,092
전 체	30,782	81.8	1,925	5.1	4,906	13.0	37,613

관측치 : 37,613,  $\chi^2_{(10)}=547$

보이고 있고, 개발·주택·고용기관이 7.8명, 환경·시민단체가 5.8명으로 가장 작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분포를 보면, 평균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것과는 약간 다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피용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이 가장 많은 영역은 사회서비스로서 10.9%의 기관이 30인 이상의 피용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분야는 피용자가 한 명도 없거나 1명인 경우의 비중도 각각 2.7%, 8.6%로서 다른 기관들에 비해 낮아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노동력의 고용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분야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평균 고용규모가 가장 큰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의 경우 5~9인부터 30인 이상의 규모까지 모두 사회서비스보다 비중이 낮고, 피용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는 비중이 더 높아서 일부 대규모 기관이 포함되어서 사회서비스기관보다 전체 평균규모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5〉 ICNPO별 기관 규모 분포와 평균근로자수

(단위 : 명, %)

	0명		1명		2~4명		5~9명		10~29명		3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교육	681	11.4	1,046	17.5	1,257	21.1	1,440	24.1	984	16.5	564	9.4	5,972	10.8
사회 서비스	451	2.7	1,419	8.6	4,464	27.1	3,847	23.3	4,507	27.4	1,791	10.9	16,479	13.5
시민단체	269	8.0	644	19.0	1,545	45.7	497	14.7	361	10.7	66	2.0	3,382	5.8
개발·고용	189	4.7	585	14.3	1,042	25.6	1,495	36.7	534	13.1	231	5.7	4,076	7.8
이익단체	167	3.8	597	13.6	2,108	47.8	592	13.4	538	12.2	404	9.2	4,407	17.4
기타	423	13.7	221	7.2	577	18.7	1,129	36.5	440	14.2	301	9.8	3,092	10.8
전 체	2,182	5.8	4,512	12.1	10,992	29.4	9,000	24.1	7,364	19.7	3,358	9.0	37,408	12.0

관측치 : 37,408,  $\chi^2_{(25)}=4,675$

피용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박애·자원·국제·종교기관 등 다양한 종류의 비영리기관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기관으로 이 비중이 13.7%로서 전체 평균 5.8%보다 현저히 높다. 그런데 이 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들보다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sup>5)</sup> 따라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피용자 없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가장 많은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용자 규모가 2~4명인 경우에 가장 많은 집단이 분포하고 있는데, 환경·시민단체와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의 경우 이 비중이 45.7%와 47.8%로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이 규모에 몰려 있다. 특히 환경·시민단체의 경우 30인 이상 규모의 비중이 2.0%에 불과하고 1명인 기관의 비중이 19.0%, 한 명도 없는 경우의 비중이 8.0%로서 평균규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체 규모 분포에서도 소규모 기관이 가장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비중(40.0%)은 전체 평균(36.4%)이나 기타 기관(44.4%)을 제외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지역별 분포는 ICNPO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문화·교육기관과 기타 기관의 경우 서울에 소재하는 기관이 64.0%와 52.3%로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 문화활동과 교육이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기타 기관의 경우에는 여러 이질적인 기관들이 섞여 있지만, 재단법인의 비중이 높고 국제 활동을 하는 기관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의 기관들은 서울 소재 기관의 비중이 전체 평균(36.8%)보다 낮는데 가장 낮은 것이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23.7%)이다. 이는 이 분야가 더 지역에 밀착해서 일해야 한다는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는 직접 지역사회에서 욕구가 있는 집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45.1%)와 함께 중소도시에 소재하는 비중(44.1%)이 다른 분야보다 더 높다.

〈표 6〉 ICNPO별 소재지역 분포

(단위: 명, %)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문화·교육	3,822	64.0	844	14.1	1,012	17.0	294	4.9	5,972
사회서비스	5,014	30.2	3,084	18.6	7,500	45.1	1,016	6.1	16,613
시민단체	1,083	31.9	684	20.2	1,221	36.0	402	11.9	3,390
개발·고용	979	23.7	1,064	25.7	1,828	44.1	269	6.5	4,140
이익단체	1,341	30.4	881	20.0	1,771	40.2	413	9.4	4,407
기타	1,617	52.3	82	2.7	1,169	37.8	223	7.2	3,092
전 체	13,857	36.8	6,637	17.7	14,501	38.6	2,617	7.0	37,613

관측치 : 37,613,  $\chi^2(15)=3,645$

5) 자원봉사자가 있는 집단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36.4%인데, 박애·자원·국제·종교·기타 기관의 경우 이 비중이 44.4%로서 가장 높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1)에서 소개한 본 연구보고서 참조.

농어촌 소재 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환경·시민단체로서 이 비중이 11.9%로 전체 평균 7.0%보다 높다. 환경·시민단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볼 때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과 함께 가장 분권화된 분포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환경·시민단체의 활동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한국정치의 중앙집중적 성격을 감안하면 중앙집중화 경향을 떨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이면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 Ⅲ. 법적 지위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특징

ICNPO에 따른 비영리기관의 특성 이외에도 법적 지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법적 지위와 설립시기의 관계를 살펴보면, 안정적인 조직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설립된 곳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기관의 비중이 18.1%로 가장 높고, 사단법인이 17.3%로 그 다음으로 높다. 사단법인의 경우 1980년대에 설립된 기관의 비중도 14.0%로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최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빠른 성장을 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설립된 기관의 비중이 다른 기관보다 크게 높아서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기에 설립된 기관의 비중은 평균보다 모두 낮다.

비법인등록민간단체도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 이후 설립된 기관의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1980년대와 그 이전에 설립된 기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의 경우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설립된 기관의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꽤 높게 나타나서 설립시기에 따른 특징을 찾기 어렵다. 이는 상대적으로 관측치수가 적어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법적 지위별 설립시기 분포

(단위: 명, %)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		2000년대 초		2005년 이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재단법인	1,171	18.1	510	7.9	681	10.6	1,024	15.9	1,820	28.2	1,251	19.4	6,456
사단법인	2,476	17.3	2,008	14.0	1,183	8.3	3,190	22.3	3,269	22.8	2,200	15.4	14,326
사회복지법인	159	7.6	124	6.0	162	7.7	357	17.1	882	42.3	404	19.4	2,088
비법인등록	1,233	9.5	943	7.3	1,309	10.1	3,015	23.3	3,919	30.3	2,520	19.5	12,939
비법인미등록	171	9.6	189	10.6	320	17.9	178	9.9	715	40.0	214	12.0	1,787
전체	5,209	13.9	3,774	10.0	3,655	9.7	7,763	20.7	10,606	28.2	6,589	17.5	37,595

관측치 : 37,595,  $\chi^2(20)=1,785$

다음으로 기관의 법적 지위와 비영리기관의 사업체 규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2007년 말 기준으로 평균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15.7명으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재단법인으로 13.8명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12.0명이 평균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비법인등록민간단체이고 사단법인이 10.9명으로 네 번째,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가 9.7명으로 평균적으로 가장 적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모별 분포는 평균근로자수와 유사한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우선 가장 평균근로자수가 많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30인 이상, 10~29인, 5~9인 규모의 기관 비중이 다른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기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법적 지위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 평균근로자수가 많은 재단법인은 30인 이상, 10~29인, 5~9인 규모의 기관 비중이 사회복지법인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5인 미만 규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세 번째로 평균근로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비법인등록민간단체의 경우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기관보다 여러 성격의 기관들이 혼재해 있는 특성을 보인다. 근로자가 한 명도 없거나 1명만 있는 기관의 비중과 10~29인, 30인 이상인 규모인 기관의 비중이 평균보다 약간 높고 2~4인 및 5~9인 기관의 비중은 평균보다 낮다. 가장 평균근로자수가 적은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는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의 비중이 14.4%에 이르고 2~4명인 경우도 38.1%에 이르는 반면, 5인을 넘는 규모에 해당되는 기관의 비중은 평균보다 모두 낮게 나타난다. 평균근로자수가 두 번째로 적은 사단법인도 5인 미만 규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높고 5인 이상 규모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낮게 나타난다.

〈표 8〉 법적 지위별 사업체 규모 분포 및 평균근로자수

(단위 : 명, %)

	0명		1명		2~4명		5~9명		10~29명		3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재단법인	58	0.9	640	9.9	1,245	19.3	2,268	35.1	1,521	23.6	725	11.2	6,456	13.8
사단법인	883	6.2	1,824	12.8	5,184	36.3	3,268	22.9	2,322	16.3	790	5.5	14,271	10.9
사회복지법인	0	0	7	0.4	347	17.3	752	37.4	564	28.1	339	16.9	2,010	15.7
비법인 등록	982	7.6	1,901	14.8	3,535	27.5	2,312	18.0	2,746	21.3	1,390	10.8	12,866	12.0
비법인 미등록	258	14.4	141	7.9	681	38.1	400	22.4	201	11.2	107	6.0	1,787	9.7
전 체	2,182	5.8	4,512	12.1	10,992	29.4	9,000	24.1	7,352	19.7	3,351	9.0	37,390	12.0
관측치 : 37,390, $\chi^2(20)=3,076$														

#### IV. 소재지역별 비영리기관의 특징

다음으로 지역에 따라 특징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자. 우선 지역과 법적 지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표 9>이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제도화 수준이 낮은 비법인등록민간단체와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 특히 비법인미등록민간단체의 비중이 전체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서울지역의 경우 사단법인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광역시의 경우 가장 평균적인 분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중소도시도 평균적인 분포와 큰 차이가 없는데 비법인미등록단체의 비중이 약간 더 높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에 따라 설립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 설립된 곳들이 17.5%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설립된 곳들이 35.8%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농어촌 지역에 비영리조직들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광역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전체적인 시기별 분포와 차이가 없지만 약간 최근 시기에 설립된 기관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9> 지역별 법적 지위 분포

(단위 : 명, %)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법인등록		비법인미등록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1,952	14.1	6,493	46.9	690	5.0	3,800	27.5	903	6.5	13,839
광역시	1,315	19.8	2,334	35.2	466	7.0	2,388	36.0	135	2.0	6,639
중소도시	2,680	18.5	4,786	33.0	899	6.2	5,729	39.5	405	2.8	14,501
농어촌	508	19.4	713	27.2	32	1.2	1,021	39.0	343	13.1	2,618
전 체	6,456	17.2	14,326	38.1	2,088	5.6	12,939	34.4	1,787	4.8	37,595
관측치 : 37,595, $\chi^2(12)=1,756$											

〈표 10〉 지역별 설립시기 분포

(단위: 명, %)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초		1990년대 후		2000년대 초		2005년 이후		전 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2,422	17.5	1,544	11.1	1,366	9.9	2,366	17.1	3,586	25.9	2,572	18.6	13,857
광역시	767	11.6	722	10.9	688	10.4	1,232	18.6	2,157	32.5	1,074	16.2	6,639
중소도시	1,693	11.7	1,227	8.5	1,336	9.2	3,235	22.3	4,272	29.5	2,738	18.9	14,501
농어촌	327	12.5	281	10.8	264	10.1	937	35.8	591	22.6	216	8.3	2,618
전 체	5,209	13.9	3,774	10.0	3,655	9.7	7,769	20.7	10,606	28.2	6,601	17.6	37,613
관측치 : 37,613, $\chi^2(15)=951$													

〈표 11〉 지역별 사업체 규모 분포와 평균근로자수

(단위: 명, %)

	0명		1명		2~4명		5~9명		10~29명		30명 이상		전체	근로자 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	910	6.6	1,808	13.1	4,357	31.7	3,438	25.0	2,182	15.9	1,066	7.7	13,761	9.7	
광역시	317	4.8	545	8.3	1,782	27.0	1,641	24.9	1,557	23.6	751	11.4	6,592	18.5	
중소도시	698	4.8	1,751	12.1	4,095	28.4	3,219	22.3	3,232	22.4	1,442	10.0	14,437	12.1	
농어촌	258	9.9	407	15.6	758	29.0	702	26.8	393	15.0	99	3.8	2,618	7.2	
전 체	2,182	5.8	4,512	12.1	10,992	29.4	9,000	24.1	7,364	19.7	3,358	9.0	37,408	47.5	
관측치 : 37,408 (결측: 206), $\chi^2(15)=735$															

다음으로 지역과 비영리기관의 규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 서울지역에 상대적으로 큰 기관이 몰려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오히려 평균근로자수가 광역시나 중소도시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서울지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영리기관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평균근로자수가 많은 곳은 광역시로 18.5명이다. 그 다음이 중소도시로 12.1명, 서울이 9.7명으로 세 번째, 마지막이 농어촌으로 7.2명이다.

사업체 규모 분포는 평균근로자수를 대체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시와 중소도시, 특히 광역시에 10~29인, 30인 이상 규모 사업체가 많고, 서울의 경우 평균적인

분포보다 소규모에 약간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어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근로자가 한 명도 없거나 1명만 있는 경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10인 이상 규모는 상당히 적게 분포하고 있다.

## V. 맺음말: 비영리기관의 특징과 고용창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본 장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발견한 주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와 병원을 뺀 나머지 전체 비영리기관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기관이다. 사회서비스기관은 전체의 44.2%를 차지하며 1만 6천 6백여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교육기관이다. 약 6천개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중은 15.9%를 차지한다. 이외에 환경·시민단체가 9.0%,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이 11.0%, 사업주·전문가단체·노조가 11.7%, 기타 기관이 8.2%이다.

최근 들어 비영리기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설립된 기관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체 비영리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기관이 최근에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최근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영역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실제로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기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체 비영리기관의 고용창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기관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기관이 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을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기관이 47.3%로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고용보험DB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설계한 조사의 특성 때문에 소규모 비영리기관이 상당수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기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비영리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기관의 비중이 크고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차원의 비영리기관 유형별 분포를 감안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용창출이 비교적 고르

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 **KLI**